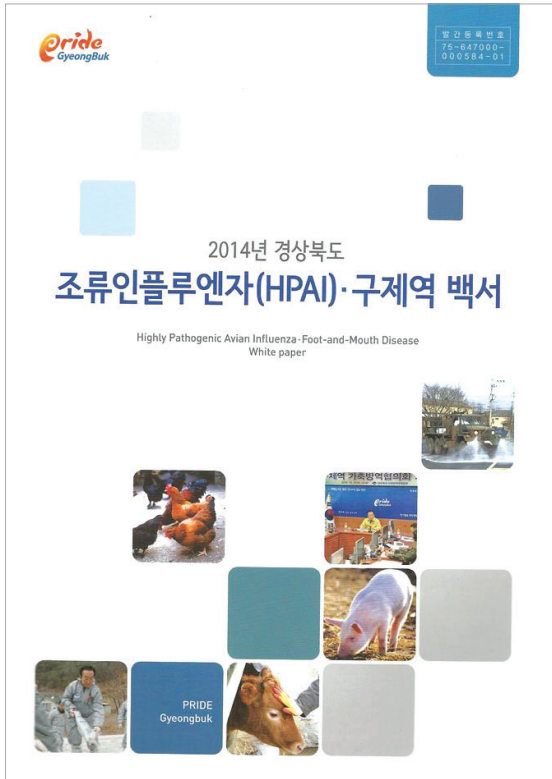


경상북도, '조류인플루엔자(HPAI) · 구제역 백신' 발간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HPAI) · 구제역 백신'을 발간했다.

△제1장 총괄 △제2장 HPAI 질병의 개요 및 진단 △제3장 2014년 HPAI 발생 및 긴급방역대책 추진상황 △제4장 HPAI 발생 관련 역학조사서 △제5장 2014년 AI 살처분 및 폐기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제6장 구제역의 개요 및 진단 △제7장 구제역 발생 및 긴급방역대책 추진상황 △제8장 구제역 발생 관련 역학조사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32페이지 분량이다.

문의 :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3-950-2682)

닭 · 오리농장 관리 프로그램 '한우리' 보급 안전한 가금산물 생산해 소비자 신뢰 제고

[표준자료 제시, 사육목표에 맞춰 농장 운영]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농장종합지원시스템 '한우리'를 농가에 제공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은 금년 1월부터 닭과 오리 농장으로 보급을 확대했다.

금번에 추가로 개발한 '한우리 가금농장 관리프로그램'은 HACCP 기록관리, 사육관리, 영양관리, 일정관리 등 총 4분야 25개 관리항목으로 구성해 육계와 산란계, 오리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HACCP 기록 관리는 농장 관리 일지와 해충, 소독, 약품, 출하 등 HACCP 인증 전 과정을 기록할 수 있다. 사육관리는 입추정보, 산란정보와 육성률과 평균 체중, 사료급이량, 사료요구율, 생산지수, 산란율, 폐사율, 산란량 등 생산성을 분석 · 제공한다.

경영관리는 농가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파악해 마리 당 수익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관리는 사료 교체 시기와 백신접종 등 농가에서 놓치기 쉬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95% 이상 계열화 된 육계와 오리는 업체 간 사육일지 양식이 달라 농가가 계열회사를 바꾸면 농가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국육계협회, 오리협회, 계열사와 협의회를 열고 계열사별 각기 다른 사육 일지를 표준화했다. '한우리 가금농장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표준양식에 따라 사육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온도·습도에 따른 체중 변화, 산란능력 등 생산성 분석과 함께 표준자료가 제시돼 사육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에도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농장단계 HACCP 도입능가 늘어날 듯]

농가에서는 '한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해 농장단계 HACCP을 쉽게 도입하고 운영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소비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 각 회원농가는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록과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육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게 돼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회원가입만으로 '한우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방법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의 아래쪽에 바로가기 중 축산정보시스템에서 '한우리'를 선택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국립축산과학원 한우리'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http://hanwoori.nias.go.kr>)를 직접 입력해 접속할 수도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한우에 이어 가금류까지의 국내산 축산물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급함에 따라 농가 편의는 물론, 안전성 제고로 소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대축산뉴스 류필선 기자 [2015. 03. 02]

오리산업 이대로 관촬은가

고삐 풀린 HPAI 여파 산업규모 반 토막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도 한 몫

오리산업이 AI악몽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산업 규모가 반 토막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4년도 오리 도압두수는 5천102만수로 전년대비 40%나 감소했다. 더욱이 금년 들어 AI가 또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올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한때 1천3천억 원에 넘어서면서 전체 농축산물 중 생산액 상위 10위권 내에 당당히 올리던 이름마저 지난해에는 제외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언제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AI가 상재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언제 어디서 AI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관심거리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AI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오리고기 소비량마저 예전 같지가 않다. 2000년대 초반부터 웰빙 바람을 타면서 오리고기 소비가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오리고기 수요마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감소는 지난해 생산량이 40%이상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오리가격은 평년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생산량 10%만 줄어들어도 가격이 폭등했던 예전과 달리 수요 감소가 예상보다 커 생산량 감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산업규모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AI 발생으로 인한 오리개량 등 산업 기초

마저 무너지고 있다. 최근 확산된 AI로 인해 PS 종오리의 살처분 두수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F1오리가 등장하는가 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오리마저 돌아다니고 있다는 풍문이다.

또한 AI가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입식을 못하고 있는 오리농가는 고사 직전이다. 1년에 최소한 6~7회전을 해야만 그나마 사료 값이라도 건지는데 AI발생 이후 1년에 입식의 기회마저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면서 육계사육으로 전업을 고려하거나 이마 전업하고 있는 농가들도 줄을 잇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리업계 관계자는 “AI로 인해 오리산업은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오리업계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2015. 03. 06]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인 올아웃’ 방식은 동일 일령의 병아리를 입식해 한꺼번에 출하하고 청소와 소독 후 재입식하는 방식이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오리 사육농가에 사육방식의 개선을 지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산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음성군 최초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에서 8농가의 AI 발생이 추가 확인돼 발생 농가는 모두 29곳으로 늘었다.

▶ 청주CBS 김중현 기자 [2015. 03. 08]

“AI 예방 동절기 오리사육 중단을” 음성 맹동지역 사육농가, 행정기관 등에 건의

충북 음성 맹동·대소면 지역에 AI 발생으로 인해 오리와 닭들이 대량 살처분 되고 있는 가운데 AI 방지를 위해 오리와 닭 사육농가들이 “동절기(12월~2월까지 3달간)에는 사육을 중단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과 맹동지역 오리사육농가 등에 따르면 매년 음성지역에서 AI와 구제역 등이 발생, 살처분과 보상비 등으로 수십억 원의 국·도비가 투입되고 있다.

올해도 지금까지 AI가 발생, 맹동과 대소면 지역 29농가 34개 농장 50만396수의 오리(닭 1개 농장 12만 3천수 포함)를 살처분 했다. 이는 음성지역 전체 오리농가 75호 100만수 중 50%를 차지

충북도, 오리 사육관행 ‘올인 올아웃 방식’으로 개선

충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29곳으로 늘어 충북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끊이지 않으면서 충북도가 오리 사육관행의 근본 개선에 나섰다. 충북도 구제역 AI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밀어내기식’ 오리 사육관행을 ‘올인 올아웃’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밀어내기식’ 방식은 여러 일령의 오리를 동시에 사육하면서 청소와 소독을 위한 휴지기 없이 출하물량 만큼 새로 입식하는 방식으로 전염병에

하는 수치며 맹동지역 전체 오리농가인 50호에 50만수와 비슷한 수치다.

이로 인해 음성 맹동지역의 많은 오리사육농가(위탁)들은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12월부터 1, 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식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면 국비투입을 줄일 수 있다는 여론이다. 농경지를 휴식하면 휴경농지를 보상하는 것처럼 말이다. 생활안정자금이 투입될 경우 가구당 월 200만~300만 원씩 3개월 동안 평균 600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총 50가구에 3억 원에서 5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해 음성지역에 AI가 발생, 60억 원의 보상금과 함께 초소운영과 소독약 구입 등에 14억원 등 총 74억 원을 투입했으며 맹동과 대소지역 농가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또한 월 300만 원씩 50가구(맹동지역)에 4억5천여 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들의 경우 구제역이 많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생활안정자금' 명목이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대수 국회의원도 "동절기 동안 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사육농가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어려움(개인과 기업들에 세금이 지원되는 사안이기 때문)이 있을 것 같다"며 "AI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음성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림을 비롯 주원, 체리부로, 모란식품, 정축산 등 축산 기업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

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1만5천수의 오리를 사육(2명이 사육 가능)하기 위해 5억원의 시설투자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3개월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 손해가 발생, 보상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 한 공무원은 "음성군에서 AI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동절기 오리사육 중단을 비롯 동시에 입식시키고 동시에 출하하는 올인 올아웃방법, 야생쥐잡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우선 중요한 것은 사육농가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와 소독과 청소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2015. 03. 11]

2015년판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착수 농축산부·농협, 기존 설계도 단점 보완 ... ICT적용기준도

농협이 정부와 함께 소, 돼지, 가금의 기존 축사 설계도를 보완해 2015년판 축사표준설계도 개발에 착수했다. 표준설계도의 단점보완은 물론 ICT적용 기준까지 담아내는 것이 목표다.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는 새로운 축사표준설계도 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3월 9일 농협본관에서 양돈·가금분과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농축산부, 축산과학원, 농협,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학계, 농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

수농장 사례 수집 및 실증 검증을 거쳐 설계도에 반영하고 다양한 표준설계도 개발로 농가선택사항을 제시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표준설계도 개발에 따른 농가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특히 농가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표준설계도를 개발키로 했다.

이번에 개발하게 되는 표준설계도 축종대상은 소, 돼지, 가금(산란계, 육계, 오리)이다. 농협축산경제는 최근 FMD와 AI 발생에 따른 가축질병 차단 방역시스템 구획과 축사규모별 시설기준 마련, 자동화 축사시스템(ICT융복합)을 도입하여 노동력절감을 위한 설계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취방지, 효율적인 분뇨처리 연계 지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기설계, 최신사양, 친환경축산 등 여러 개념을 적용해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의견을 충분히 담기 위해 개발협의회의에는 실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도 포함시켰다.

축사표준설계도 개발과정은 개발협의회를 거쳐 설계방향이 확정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2단계 과정과 농축산부의 자문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최종승인을 통해 국가인증 축사표준설계도로 완성된다.

농협은 앞으로 분과별로 분과장을 선출해 세부설계협의회를 이달 중순부터 가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015. 03. 11]

AI 직격탄에 소비 시들 ... 오리산업 회생대책 절실



마 낙 중
한국오리협회
부회분과위원장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로 인해 오리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AI로 인해 산업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오리고기 공급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오리고기 소비 감소도 원인이지만 다양한 먹거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갈수록 오리고기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생산액 2조원대를 눈앞에 두면서 당당히 전체 농축산물 중 10위권 내를 유지해 오던 오리산업이지만 이제는 순위권 내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리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오리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 축산신문 [2015. 03. 18]

충북도, AI 예찰지역(10km 내) 오리 일제검사

충북도 구제역 AI 방역대책본부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AI 예찰지역(발생농가로부터 10km 내) 내 오리에 대한 AI 일제검사를 추진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러스가 증상 발현이 늦거나 뚜렷하지 않아 농장주의 조기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한 도내 오리 사육농가 일제검사 시 감염초기 단계로 미검출된 농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검사를 통해 AI 감염농가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1차 일제 검사에서 오리 109농가 검사 결과 11개의 AI 양성농가를 찾아냈고 이번 2차 검사에서는 3월 19일 현재 20농가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일제검사와 더불어 AI 예방지역 내 조기 도축출하를 유도하고 방역대내에 신규 병아리 입식 금지를 통해 감수성 동물을 줄여 나가면서 AI를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 측면에서 오리 사육농가의 관행적 사육 방식 개선을 위해 3월 16일부터 병아리 입추 전에 청소·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인올아웃' 사육 방식으로 전환, 오리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이번 기회를 통해 오리 사육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진천·괴산·음성에 상설 거점소독소 설치(15억원), AI 면역증강물질 공급(6억원), 가금류 랜더링 시설 설치(18억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4억원) 등 AI 방역 관련 사업도 조기 집행기로 했다.

▶ 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2015. 03. 19]

음성 육용오리 농장 AI 확진 ... 충북 35번째

충북 음성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월 23일 음성군 금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도축 전 출하 검사를 진행한 결과 AI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충북도 방역대책본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AI가 발생한 농장은 모두 35곳으로 늘었다. 음성군은 이날 오리 1만6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 했다. 음성에서 지난 2월 21일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는 이번 농장을 포함, 총 70만8천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 됐다.

▶ 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2015. 03. 24]

나주·영암 AI 이동제한 해제 검사 착수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소장 이태욱)는 올해 AI가 발생한 나주 세지면을 중심으로 10km 이내 지역인 나주·영암지역 내 닭·오리 및 축사시설에 대해 지난 3월 17일부터 바이러스 잔존 여부 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나주에서 발생했던 8개 농장을 포함해 방역지역(10km) 내 닭·오리 사육 및 미사육 농장 등 100개소의 745개 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역별로는 나주 78호, 영암 22호다.

이는 지난 2월 9일 이후 나주에서 AI가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고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지역(10km) 내 닭·오리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다.

오리를 사육 중인 농장에서는 혈액, 구강, 분변

시료를 동별로 채취하고 현재 사육이 없는 빈 농장에서는 동별로 축사 바닥이나 시설 등의 환경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전남도축산위생사업소는 2주간 방역지역 내 모든 농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욱 소장은 “전국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매일 축사 주변을 소독하고 농장 내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2015. 03. 20]

진천군의회 시관련 전액 국비지원 건의

진천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 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그동안 방역과 살처분 등에 6억 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앞으로 50만 마리가 더 살처분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자체단체가 부담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방역과 살처분 사후 처리에 들어가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피해 보상금과 방역 초소 운영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2015. 03. 20]

AI 장기화, 농가만의 잘못인가



AI와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몇몇 지자체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농가에 부담토록 한데 이어 산란계의

단위면적당 사육수수를 조절하려 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도마 위에 올랐던 두 가지 문제는 아직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농가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다.

그나마 백신이 있어 접촉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FMD와 달리 AI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차단방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양계농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더군다나 FMD의 경우 백신을 충실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백신이 없는 AI는 발병을 막기가 더욱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은 농가의 신고의지를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AI가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의업계의 한 관계자도 “농가들은 AI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정부는 삼진아웃제, 살처분 보상금 부담 등으로 농가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AI의 확산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서 신고농가에 오히려 포상을 해야 한다”라

고 지적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AI에 농가들의 목을 죄는 정책까지, 양계농가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 축산신문 <기자수첩> 김수형 기자 [2015. 03. 20]

“음성 삼성면 닭·오리 120만 마리 우리가 지키자” 기관단체에 이어 출항인사까지 지원 나서

음성군 삼성면(면장 이순원) 지역에서 AI로부터 관내 가금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면 관내에서는 닭 58농가 108만마리, 오리 15농가 13만마리 등 모두 73농가에서 121만 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다.

면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73농가에 대해 농가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 1주일에 2회 이상 전염병 감염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예찰하고 있다.

또한, 마을단위 척사대회, 각종 기관단체 회의 등 면내의 각종 행사를 자제하는 등 AI로부터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관내 기관단체에서 AI와 구제역 방역에 애쓰고 있는 근무자와 직원들을 격려하는 발걸음이 이어지며 큰 힘이 되고 있다.

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상국)가 구제역·AI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근무자들을 위해 라면 및 생수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고 삼성면 이장협의회(협의회장 남흥식)도 라면과 각종 간식 등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염숙자)

도 면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경삼성면민회(회장 조철호)는 휴일도 반납하고 AI와 산불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하며 고향 사랑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이순원 삼성면장은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단체뿐 아니라 출항인사까지 격려를 해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방역과 예찰로 AI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일보 남기중 기자 [2015. 03. 26]

문답으로 알아보는 ‘2015 농업정책자금’ 농가사료구매자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4,000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사료의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외상거래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지역별로 배정된 자금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 해주기 때문에 융자재원이 소진되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 대출금리가 지난해 3%에서 올해 1.8%로 인하됐다. 대출을 갚는 방식은 2년 일시상환 조

건이다.

자금의 용도는.

- ▶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용도로 동시사용도 가능하다. 신규 사료구매 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을 구비해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 ▶ 사료공급업체에서 외상으로 구입해 발생한 채무만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상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이 자금의 지원목적이 외상거래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대출금은 농가가 사료 구매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대출금 사용목적이 사료구입으로만 제한되지 않아 사용처가 유동적이어서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등록제 대상이 아닌 말·토끼·꿀벌과 사육시설 면적이 15㎡(약 4.5평) 미만인 닭·오리·메추리·타조·꿩 사육 농가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사료구매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공기업 같이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하지만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지원종족은.

-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이다. 이 밖에 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등도 지원대상이다.

축종별 대출한도는.

-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육농가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발생한 양계·오리 사육농가는 대출한도가 9억 원으로 늘어난다. 사슴처럼 기타가축을 키우는 농가는 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계열화농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다.

- ▶ 해당 시·군에 있는 지역농·축협에서 대출을 해준다. 다만, 기존 대출자의 추가대출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NH농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축종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 ▶ 양돈은 2013년도 모든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와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농가는 대출이 안된다. 한·육우를 포함한 다른 축종은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어 신규농도 선정 · 추천 ·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대출은 무슨 의미인가.

- ▶ 시 · 군별로 배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축종에 관계없이 농가별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가가 대출신청을 했더라도 용자재원(시 · 군별 배정액)이 모두 소진 되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선착순 대출을 하는 이유는.

- ▶ 선착순 대출을 실행해 예산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 ▶ 2013~2014년 대출 실행률이 평균 71% 정도이고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이 4,000억 원으로 책정돼 충분하다고 본다. 때문에 지원 요건을 갖추고도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예산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 ▶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농민신문 임현우 기자 [2015. 03. 27]

